

특별기획

대선, 선택이 미래다

- A15 특별기고- '불교와 정치'
- A16 대선후보들이 말하는 불교
- A18 미리 보는 대불교계 공약



올 12월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과 불교계의 움직임이 바쁘다. 정치권은 '불심'을 잡기 위해 불교계 공약을 준비하고 있고, 불교계 또한 대선 기간을 이용해 불교계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지난 6월 조계종 총무원과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발족한 '불교정책기획단(공동대표 조계종 기획실장 승원 스님, 허경만 불교인재개발원 이사장)'이다. 본지는 올 대선에서 영향력을 미칠 '불교계 10대 공약'을 선정했다.

불교계 10대 공약

- ☑ 가이산 등 수행환경문제 해결
- ☑ 전통사찰 중첩 규제 완화
- ☑ 문화재관람료 문제 해법 제시
- ☑ 농지법 개정
- ☑ 북한 사찰 복원 등 대북교류 활성화
- ☑ 불교문화재 보존 및 관리정책 강화
- ☑ 수목장 문제 해결 장사법 개정
- ☑ 불교계 복지시설 지원책 마련
- ☑ 폐사지 관리 및 복원 시스템 구축
- ☑ 불교문화 콘텐츠 내실화 대책 수립

전통사찰 중첩규제 풀고 문화재 보호대책 내놔야

'불심' 잡는다

◆가이산 등 수행환경 문제 해결=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후 북한산 관동도로 문제와 경부고속철 천성산 관동 도로 불교계와 불리한 관계를 유지했다. 대통령 후보 시절 불교계 10대 공약으로 북한산 관동도로와 경부고속철 천성산 관동 도로 백지화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강행했기 때문이다. 사찰 수행환경과 자연환경 보존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지난 3월부터 가이산을 통과하는 순천도로와 송전탑 건설을 막기 위한 가이산살리기 운동이 전개되는 등 전국 곳곳에서 수행환경문제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이산과 관련해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정병 스님은 "차량용 관동도로 대신 사람이 걷는 명상길로 만들고, 태양광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단지를 건설하는 등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통사찰 중첩 규제 완화=올해 초 수도권지역 사찰주지스님들이 주축이 된 '전통사찰 관련 국가 법령개정추진위원회' 출범과 지난 4월과 6월 개최된 '불교정책 개선을 위한 연속 토론회'와 '불교 규제 법령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관통하는 것은 전통사찰에 대한 중첩 규제다. 수도권지역 전통사찰들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의 규정에 묶여 중·개축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각종 벌금을 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조계종 교구본사주지스님들은 '불교 규제 법령 개정 촉구 결의문'을 통해 전통사찰 △중개축 면적 규제 완화 △소방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개발제한 구역 부근 철도 △각종 국가 법령의 중첩된 규제 조항을 '전통사찰 보존법' 상의 규제에 일원화 등을 촉구했다.

◆문화재관람료 해법 제시=국립공원입장료 폐지 후 문화재관람료 징수 문제가 새해 벽두부터 불교계를 괴롭혔다. 일부 시민환경단체도 문화재관람료 징수 거부 운동을 벌여 조계종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이에 대해 문화재사찰위원회(위원장 현승)는 지난 7월 '국립공원제도의 문제점과 위헌성-문화재관람료에 대한 시비의 본질'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채택하면서 정부 측을 강하게 비난했다. 또 조계종측은 △자연공원법상 '역사문화지구' 설정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 범위 확대 △국립공원 내 불교문화재 홍보 및 문화관광해설사의 불교계 기관 양성에 대한 제도적 인정 등을 정부 측에 요구했다.

◆농지법 개정=농지법 시행규칙 제4조(시월·연구·실습지 등의 용도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공공단체 등의 범위) 별표1에 의하면 "전통사찰보존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등록된 전통사찰"에 한해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 농사를 짓는 실습지여야만 소유를 인정받는다. 전통사찰이 아닌

일반사찰은 이에 농지를 소유할 수조차 없다.

사찰이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삼보장자가 망실되고 도둑질 일탈이 발생하기도 한다. 제3자를 내세워 농지를 샀을 때 땅을 판 사람이 명의 수탁자가 본 소유주가 아님을 안 경우,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도 등기는 무효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종교시설 신축 시 농지 전용이 가능하도록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해야 한다. 또 전통사찰보존법 등 관련법도 손봐야 한다.

◆북한 사찰 복원 등 대북교류 활성화=금강산 신계사 남북공동 낙성식이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신계사 일대에서 진행됐다. 남북의 조계종과 북측의 조선불교도연맹이 신계사를 공동으로 복원하기로 합의하고 대동보전 의 11개 전각과 삼층석탑을 복원한 것이다.

2007 남북정상회담 후 남북 교류에 많은 관심과 기대감이 쏠리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도 지난 6월 내금강을 답사한 후 "내금강은 불교성지가 많기 때문에 마땅히 복원해야 한다"며 "신계사 낙성식 후 북측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마하연사 등 북한 사찰 복원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또 신계사에서 템플스테이를 진행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남북 교류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월 1회로 제한하고 있는 개성 영통사 성지 순례 문제도 전태종 측과 풀어야 할 숙제다.

◆불교문화재 보존 및 관리정책 강화=우리나라 문화재 중 70% 가량이 불교문화재일 정도로 불교문화재 보존 및 관리정책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다. 하지만 불교문화재 도난과 소실 등으로 보존 관리 정책이 여론의 질타를 받기도 한다. 이와 관련 불교문화재 도난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문화재보호법 개정, 사찰문화재 일제 조사 및 이를 통한 문화재 지정 확대, 문화재청 강화(사법단속반 확대), 검찰·경찰에 문화재전담반 설치 등을 주요 정책으로 내용을 만한다.

화재로 인한 성보문화재 피해를 막기 위해 화재재정과 소방방재청, 산림청으로 제각각 분산돼 있는 책임단위를 통합하고, 통합된 기관과 사찰과의 유기적인 연대도 필요하다. 또 사찰이나 문화재 화방예방과 관련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 외에도 문화재청 승격, 문화유산 국에 불교문화재와 신실 등도 고려할만 하다.

◆수목장 문제 해결 장사법 개정=지난 5월 수목장 등 자연장 제도 도입을 빼데로 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 내년 5월 시행을 앞둔 이 개정안은 장사(葬事)시설 부족을 해소하고 자연



사진 위는 시민환경 단체들의 문화재관람료 징수 거부 운동. 아래는 개성 영통사 복원 낙성식. <현대불교 자료사진>

친화적인 자연장 제도를 시행해 환경훼손을 막는다는 목적이 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에 설치된 수목장은 불법시설물로 규정된다.

불교계에는 2004년 전국에서 처음 수목장을 만든 영선 은혜사를 비롯해 경주 기림사, 강화 전등사 등이 수목장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안대로라면 이들 수목장은 불법시설물로 낙인찍혀 사실상 운영이 어렵다. 또 문화재보호구역에서는 수목장을 조성할 수 없어 문화재를 보유한 사찰은 특별한 경우 문화재청장의 허가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 불교계에서는 "수목장을 포함한 자연장을 사찰 경내나 사찰림에서는 신고사항으로 규정해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특별규정이나 예외 규정을 뒤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관련 시행령 개정이 추진되고 있지만 불교계의 요구가 담겨지지 불투명하다.

◆불교계 복지시설 지원책 마련=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영유아보육시설과 노인요양 시설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불교계가 수탁·운영하는 각종 복지시설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현재 그랜벨트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 부설로만 노인요양시설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의 필요에 따라 유류 부지를 가진 민간 시설 신·개축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사찰은 장애인들의 접근과 이동이 어려운 깊은 산중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사찰이 장애인의 이용권을 보장하는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일반 공공시설과는 다른 사찰건축물 등에 적용될 수 있는 편의시설 설치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폐사지 관리 및 복원 시스템 구축=폐사지는 현

재 법등(法燈)이 꺼져진 사찰을 말한다. 조계종이 1999년 조사한 '전국 불교사원지 현황'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2141개의 폐사지가 있다.

최근 폐사지 운영과 관리방안 및 복원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폐사지와 관련한 국가사업은 중장기적인 사업으로서 정부가 주도해 종단과 시민이 함께 이끌어가는 방향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또 폐사지 조사, 법률적 제도화, 사지복원, 운영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것도 고민해야 한다.

한나라당 정중복 의원은 "문화재청에서 단독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무리"라며 "사찰 출도 문화재에 대한 불필요한 소송을 방지하고 사지 보호를 위해 조계종과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교문화 콘텐츠 내실화 지원책 수립=문화형성에는 정신적으로 종교가 근간을 이루고 있어 1600여의 역사를 가진 불교를 배제하고서는 이르기 전개가 어렵다. 그러나 현재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을 비롯한 각종 기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불교문화 원형 사업에 불교계 인사 참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콘텐츠 질 저하뿐만 아니라 불교 왜곡 가능성도 있다.

불교 관련 콘텐츠 내실화를 위해 불교계 및 전문산업인, 학계인들로 구성된 복합적인 로드맵이 구성돼야 한다. 또 문화원형사업 및 불교관련 국가사업을 불교계가 주도해 과제선정, 심사, 결과를 등을 책임지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또 이와 관련한 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부처님 가피가 함께 하는 절 기원사 산사음악회

2007 우리동네 어울음악회 - 기원사와 함께 하는 노래가 있는 저녁

기원사의 30년 역사는 우리 동네의 아름다운 주민들이 함께 일궈 온 따듯하고 보람찬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의 노고와 다가올 시간의 희망을 함께 구어 보는 노래잔치를 마련했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이 멋들어진 시간에 정태춘 박은옥 부부의 화음과 유진박의 화려한 전자바이올린 선율이 함께 할 것이니 우리 동네는 하루저녁 극락 세상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을 이 기쁜 자리로 주인공으로 초대합니다.

원장 지연 합창

2007 우리동네 어울음악회

일시: 2007년 11월 17일(토) 오후 5시
장소: 기원사 경내
출연진: 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 가수 정태춘 박은옥, 파파스, 국악가 안희진 외 3명, 대금 조석호, 기원사 합창단

시선

1. 개회-사회: 김병조
2. 주지스님 인사말씀
3. 콘스님 축사
4. 공연

출연진 소개

- 사회: 김병조
- 정태춘 박은옥 - 유진박
- 조석호(중요무형문화재 제20호 대금정악 이수자)
- 안희진(경기소리 중요무형문화재 제31호 이수자)
- 파파스(전 서태지와 아이들 멤버)
- 기원사 합창단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392-106 TEL 02)918-0034

기초에서 창작까지 전통 꽃예술의 실기와 이론

한국 꽃예술과 불교

꽃예술의 이론과 실기를 꽃꽂이를 배우는 사람과 지도하는 사람 그 누구도 활용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초에서 창작까지 전 과정을 분류하여 수록했습니다.

꽃예술 과정 1-2: 1)소재에 대한 기초기본 2)화기의 선택 3)수반꽃이와 병꽃이의 요령 4)수반 꽃꽂이의 19가지 형태와 병꽃이 14가지 형태 각 화형에 대한 작품과 상세한 해설

꽃예술 과정 3: 자유 창작의 기본 원리인 선·면·매스 등 다양한 구성 기법을 21가지로 분류

꽃예술 과정 4: 1)불전공화의 역사적인 유래와 함께 이해를 돕는 설명 2)의식 및 재래명절을 세분하여 작품과 함께 해설

한국 꽃예술 협회(금연종회) 1972년 인문
현재 국내전 및 국제전 30회 이상 출품
전국 불교꽃꽂이 연구 및 불교꽃예술원장(현)
전국 불교꽃꽂이 연합회 1988년 창립 및 초대회장 역임
병녕사 승가대학 10년간 출강
2005년 7월 European Floral Art Course 과정 수료
한국화예(디자인학회) 이사(현)
한국꽃예술협회 이사 및 본협꽃예술중앙회 회장(현)

구입문의: 기원사 02)919-0034

꽃꽂이 강의 (초, 중, 고, 사범과정)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3시 기원사
- 매월 넷째 목요일 오후 2시 불교꽃꽂이연구

* 책을 구입하시는 분은 3개월 무상으로 강의 수강 할 수 있습니다. (재료 본인 부담)